



[미래일본2030] 아베 이후 일본은 어디로? (6)

미래 일본의 외교안보 과제: 미일동맹, 대중정책, 한반도정책

이기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I. 들어가며

본 연구에서는 미래 일본의 외교안보 과제를 ‘2030’이라는 시기를 염두에 두고 예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외교안보는 글로벌 차원, 지역적 차원, 한반도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일동맹의 글로벌화’로 대표되는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중국의 부상의 지속성과 함께 일본의 대중정책을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미래 예측가능한 현안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다.

일본 정부는 장기적인 전략을 생각할 필요성을 느끼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왔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아베 정부는 국제질서의 변동에 대한 대응을 일본의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계기로 인식하고, ‘부국강병(메이지)’, ‘소득배증계획(쇼와)’과 같은 국가목표와 국가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전망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아베 정부는 2013년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이하 ‘국가안보전략’)'을 각의결정을 통해 채택하였고, 전후 최초로 일본의 장기적인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는 서두에서 글로벌한 안보환경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다. 즉, “이번 세기에 들어 국제사회에서 전례 없는 파워 밸런스가 변화하고 있고 국제정치 역학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적혀 있다. 또한 “파워 밸런스(power balance)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중국, 인도 등의 신흥국이며, 특히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다”고 적혀 있다. 이와 같이 파워 밸런스의 변화와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에 대한 ‘국가안보전략’의 문제인식은 10년 후의 국제환경을 상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안보전략’에는 “파워 밸런스의 변화는 국제정치경제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의 이동을 촉진했다”라고 적혀 있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의 ‘국제정치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고, 미래의 행방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이 어떠한 외교안보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지역의 미래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II. 국제전략환경의 변화

1. 최근 국제전략환경의 변화

최근 국제전략환경은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로 대표되듯이 ‘자국우선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 배경으로는 민족주의와 포퓰리즘과 같은 국내적인 움직임이 있다.

1989년 냉전이 끝나고 1991년 소련이 붕괴한 이후 1990년대는 기본적으로 ‘미국패권’의 시대로서 세계는 비교적 안정된 시대였다. 일본 입장에서 이 시기는 대아시아, 대미관계 모두 조화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 크게 변하게 된 계기는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미국동시다발테러사건이었다. 유일 패권국이었던 미국에 대한 이슬람의 정치적 측면에서 강렬한 반격이었고 이에 따라 미국의 자세는 크게 변화해갔다. 그 다음 계기는 경제면에서 미국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리먼 쇼크(Lehman Shock)(2008년 9월)이었다. 게다가 중국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이 끝나는 것도 2008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국발 ‘중국 우선주의’는 이 시점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약 10년 뒤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2017년 미국에서 ‘미국 우선주의’가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일본을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강력한 지도자, 즉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아베(安倍晋三) 총리 등 2012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그 1년 전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 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해양 분야를 중심으로 세력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상이 있으며, 주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이 지역의 항만과 철도, 도로 등 인프라 정비를 통해 중국 주도의 거대경제권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구상의 배경에는 미국과의 경쟁 혹은 대항이 있다. 특히 중국은 주변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서 ‘일대(一帶)’는 중국,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을 연계하는 육상교통망인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지칭하며, ‘일로(一路)’는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을 연결하여 유럽에 이르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지칭한다. 이를 통해 중국은 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해상, 육상의 길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를 포괄하는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를 구성하기를 기대한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강대국 부상 및 해양권력 투사의 지정학적 전략을 내포한다. 미중 경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대일로를 통한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한다. 특히 소위 ‘진주목걸이 전략’¹을 구상하면서 해상 실크로드를 통한 해상운송로 확보 및 해군력 확대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미국 해군의 봉쇄망을 무력화하고 인도, 일본 등을 견제하고자 한다. 특히 해상 실크로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인도차이나 반도와 말레이시아를 관통하는 경제회랑의 구축을 통해 중국-인도-터키의 경제관계를 연결하려는 구상이다.

¹ 중국은 자국의 동부 연안에서 출발해 인도차이나를 돌아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항구를 거쳐 파키스탄 거점에 도달하고, 다시 홍해를 지나 그리스까지 이어지는 해상 운송로를 개척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이 모양이 마치 목걸이를 닮았다고 해서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 전략이라고 칭한다.

이에 대응해서 미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FOIP)’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방부는 2019년 6월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서 2018년 11월 펜스 부통령의 중국 비판을 계승하면서 미국을 서태평양에서 몰아내려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나타나 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중국을 법의 지배에 기반한 질서의 가치와 원칙을 침해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중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인도태평양의 지역패권과 장기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초강대국을 지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남중국해의 군사거점화와 중국 내 인권침해 등 중국의 국제규범에 반하는 문제행동을 열거하고, ‘중국은 군의 현대화와 약탈적인 경제적 수법을 통해 자국의 이익에 맞는 지역 질서를 변혁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경고하였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모든 국가의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의 촉진’을 지지한다고 선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각국과의 동맹과 우호관계를 ‘네트워크화된 안전보장 구조’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일본과 한국, 호주, 인도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촉진하면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여를 재확인시키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은 서로 인도태평양을 미중이 대결하는 공간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국제정치학에서 논의하는 ‘세력전이’의 논의와 부합한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아시아에서 지역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대립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중 양국 관계의 동향이 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계의 기본구조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즉, ‘미중 중심의 아시아 지역질서론’이다(菊池 2019, 2).

한편 미중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질서가 형성되는 것에 대한 경계심도 존재한다. 최근 인도와 아세안에서 주장하는 ‘인도태평양’에 관한 구상 및 인식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미중 중심의 지역질서가 스스로의 행동의 폭과 정책선택을 제약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향후 정책전개과정에서 불투명한 미중관계에 지역의 미래를 맡기는 위험성도 인식하고 있다.

일본도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주장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하면서도 대중정책과 이 지역의 무역질서와 관련된 정책에서 반드시 미국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일본도 지역의 국제관계가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자국의 운명이 미중관계 동향에 좌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단독으로 국제질서 형성의 주체가 될 수는 없지만 일정한 국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력을 유지 혹은 증대시킬 수 있는 국가로 평가된다. 이러한 국력을 바탕으로 일본은 지역의 국제관계 형성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관여를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인도, 호주, 아세안은 스스로의 행동의 여지를 확장할 수 있는 ‘다극 아시아’ 구도를 희망할 수도 있다(菊池 2019, 2)..

2. 일본의 미래상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가 2012년 12월 10일 발표한 ‘세계 조류 2030’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시아 질서는 향후 15-20년 사이에 특정 국가가 미국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전망하면서도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서 패권국가가 될 국가는 없다고 전망한다. 한편, 일본의 국력과 관련해서는 ‘가장 불안한 국가, 일본’이라는 표현을 통해 일본의 국력은 계속해서 쇠퇴하는데 특히 잠재적 경제성장력의 저하와 재정 파탄의 위험이 큰 것으로 전망한다. 무엇보다 2030년에 일본의 중심연령은 인도 32세, 중국 43세와 비교해서 높은 52세로 예측하면서 이러한 원인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즉 일본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라 장기적 성장의 가능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것이라고 전망한다(米国家情報會議 2013).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세계경제장기예측을 발표하였다. 2000년의 구매력 평가를 기준으로 일본의 GDP는 2020년 4.2조 달러, 2030년 4.7조 달러, 2050년 5조 달러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중국은 2020년 17.3조 달러, 2030년 25.2조 달러, 2050년 33.4조 달러로 급격히 증가한다. 달리 말하면 2030년에 중국의 GDP는 일본의 5배에 달하고 2050년에는 7배로 격차는 벌어질 전망이다. 또한 일본경제의 성장률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진행되고 투자와 생산성이 현재 상황으로 계속된다면 2030년대 전반기에 제로 성장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 2019).

국력은 경제 규모에 더해 군사력, 기술력, 정치적 리더십 등에 의해 종합적으로 정해진다. 이를 전제로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면 미국 일극 시스템에서 미국-유럽-중국-인도의 4극 시스템으로 이행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일본은 일극을 구성하지 못 하지만 ‘미들 파워’로서 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미일동맹을 견지하면서 지역적 힘의 균형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면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이 지역의 안정을 추구할 것이며, 따라서 글로벌화, 지역적 경제연대의 시대에 맞춰 일본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일본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은 2015년 3월 ‘20년 후의 아시아태평양지역질서와 일본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外務省 2015). 이 보고서 제1장에서는 ‘현재의 국제정세와 일본의 대응’, ‘일본을 둘러싼 국제환경’, ‘장기적 전략의 필요’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중국·대만’, ‘한국·북한’, ‘미일관계’, ‘아시아태평양지역’, ‘동아시아 안보 환경’, ‘글로벌화와 일본’을 주제로 각 사안별에 따른 ‘일본이 희망하는 시나리오’와 ‘희망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

일본 자민당 국가전략본부는 2014년 6월 30일, ‘2030년의 일본’이라는 제목의 중간보고서를 아베 총리에게 보고하였다(自民党国家戦略本部 2014). 이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4개의 대변화(인구, 기술, 환경, 시공)와 국제질서 변동,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인간사회에 가져오는 커다란 영향을 정리하였다. 먼저 인구의 변화 측면에서 일본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진행될 것이고 2030년에는 고령화율이 약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제질서의 변화 측면에서는 2030년까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프레젠스(presence)에 대해서는 현재와 거의 변하지 않는 형태로 유지 가능하다고 예상한다. 한편 한반도는 중국의 공산당 지배체제가 계속되는 한 두 국가로 분단된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가령 상황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경제력을 가진 핵무장국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4개의 대변화가 인간사회에 가져오는 영향을 ‘경제·성장전략’, ‘고용’, ‘에너지’, ‘사회보장, 재정’, ‘지역 만들기’, ‘식량·농림수산업’, ‘교육’ 등 7개 분야에 걸쳐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4개의 대변화와 국제질서의 변동에 대한 대응을 일본의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계기로 인식하고, ‘부국강병(메이지)’, ‘소득배증계획(쇼와)’과 같은 국가목표와 국가전략을 책정해야 한다는 중간보고적 성격을 갖고 있다.

2012년 4월 일본 경제계, 노동계, 학계가 참여하는 ‘일본 아카데미아(日本アカデミア)’가 발족하였고, 2013년 4월에 ‘장기비전연구회’를 설치하면서 다섯 개 연구그룹이 각각 3개의 질문을 설정하였다. 이 중 ‘국제문제’ 연구그룹의 3개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일본은 글로벌 사회에서 어떠한 국가를 지향하는가? 그리고 그 목적의식을 어떠한 형태로 세계에 알릴 것인가?
- 2)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협력관계 강화에서 일본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 3) 미일동맹의 미래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2015년 2월 ‘장기비전연구회’는 ‘장기비전연구회 최종보고서: 전후70년 우리들이 다음 세대에 남겨야 할 일본의 모습-2030년을 바라보며’를 발표하면서 다원적이고 열린 국제질서의 실현을 향해 행동하는 일본의 모습을 제시하였다(日本アカデミア·長期ビジョン研究会 2015).

한편 ‘장기비전연구회 최종보고서’에서는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력, 정치력, 외교력 측면에서 일본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있다. 먼저 경제력 측면에서는 2050년까지 상정해 봤을 때 GDP의 세계 비율에서 일본은 현재의 12%에서 3%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2050년 GDP 세계 비율은 중국 29%, 인도 16%, 미국 16%, 브라질 5%, 멕시코 4%, 러시아 4%, 일본 3%, 인도네시아 3%의 순으로 전망하였다. 일본의 GDP 세계 비율은 2006년 12%, 2020년 8%, 2035년 5%로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2035년 일본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갖지 못 한다고 예측하였다.

군사력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본은 과거에 경제 대국이었지만 군사력 측면에서는 GDP 대비 방위비가 1% 내외로 유지되었다. 여기에는 ‘미일안보조약’과 ‘평화헌법 9조’라는 2개의 축에 의해 일본의 군사력이 억제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군수산업의 발전 촉진 및 무기수출 규제 완화로 인한 군사력 증강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일본의 병력 수는 약 25만명이고, 여기에는 미일동맹에 기반한 주일미군이 어느 정도 군사력을 상쇄하고 있다. 2035년 일본의 군사력은 미일동맹의 유지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즉 미일동맹이 유지된다면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나아가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일본 국민 대부분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보다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과학기술력 측면에서 보자면 일본의 노벨상 역대 수상자(과학기술 분야) 수는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는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많다. 기업을 포함해서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관점에 선 연구를 중시하는 일본의 연구 자세가 평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향후 전망은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일본 국가 재정 사정이 좋지 않으며, 대학의 연구기반이 위기적인 상황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일본의 연구 환경이 세계에 보다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는가의 여부에 따라 과학기술력의 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치력 측면에서 보자면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긍정적 요소는 국제질서의 변동에 대한 대응을 일본의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계기로 인식하고, ‘부국강병(메이지)’, ‘소득배증계획(쇼와)’과 같은 국가목표와 국가전략을 책정하려는 정치인들의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 요소로 아베 수상 이후의 정치리더십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민당 아베 정부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의 부재 및 아베 수상 이후 자민당 내 후계자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 가

운데 초래될 수 있는 포스트 아베 정치리더십 부재를 우려하고 있다.

외교력 측면에서 보자면 일본은 현재 UN 예산의 약 11%를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일본은 1957년 책정한 일본 외교 3대 기본방침(UN 중심주의, 미일 동맹, 아시아외교)을 바탕으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노력 중인데,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역사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으로 미일동맹 중심의 외교가 반대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외교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보고서에서는 일본을 한 마디로 ‘가장 불안한 국가, 일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국력은 계속해서 쇠퇴하고 잠재적 경제성장력의 저하와 함께 재정 파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2030년에 일본의 중심연령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와 함께 52세로 추정되는 가운데 인도 32세, 중국 43세 등 경쟁국 보다 중심연령이 높을 예정이다. 즉,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라 장기적 성장의 가능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의 2030 국가전략은 대내적 요인인 고령화, 소자화, 인구 감소 등과 대외적 요인인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질서 변동 등을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2030의 모습을 그려내기 보다는 과거와 현재를 뒤돌아보고 현재의 모습을 바탕으로 일본이 원하는 2030 국가전략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3. 일본의 외교안보 노선

당분간 일본의 대외전략의 기초는 현재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2013년 12월, 일본 정부는 전후 최초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책정하였다(首相官邸 2013).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크게 3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미일동맹 강화이다. 둘째, 독자적인 방위력 증강이다. 셋째, 다층적 안보네트워크 확대이다. 즉 한국, 호주 등 우호국과의 안보협력관계 구축(ASEAN 포함)이다.

현재 아베 정부는 보통국가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명찬(2008)은 일본의 국가노선을 ‘(미일)동맹과 자주’, ‘(평화헌법)개헌과 호헌’이라는 동맹과 군사력의 역할에 따라 4가지 국가노선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후 일본은 평화헌법을 지키면서(호헌) 미일동맹을 유지한 ‘통상국가’ 노선을 유지했지만, 현재는 평화헌법의 개정(개헌)을 추진하면서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보통국가’ 노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향후 일본이 ‘보통국가’를 넘어 ‘권력국가’의 길을 걸을 지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외교안보 노선의 관심사는 보통국가에서 권력국가로 진행될지 여부이다. 여기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는데 중국의 압도적 우세에 따른 일본의 중국에 대한 편승 전략의 채택, 미국의 아시아 철수에 따른 미일동맹 지속 여부, 독자적 군사력 보유(일본의 핵무장), 미중 관계에서 중국의 역전 현상 등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요인들이 일본의 권력국가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

아베 정부 혹은 포스트 아베 시대에도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보통국가 노선 추구하고 함께 자체적인 방위력 증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부상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과의 이해 일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 즉 중국의 압도적인 국력 및 미국의 아시아 철수 등이 발생할 시 일본의 대외전략 및 군사전략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4개의 국가노선(평화국가, 통상국가, 보통국가, 권력국가) 중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은 ‘보통국가’ 노선에 해당되며 20년 후에도 이 기조를 쉽게 버리지 않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보통국가 노선 유지에 변수가 있다면 중국의 압도적 우세에 따른 중국 편승 전략 채택, 미국의 아시아 철수에 따른 일본의 권력국가화 시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2030년의 세계질서와 동아시아 질서를 살펴볼 때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가 최대의 변수가 될 것이다. 미국의 상대적 지위 저하와 함께 신흥국의 부상에 따른 ‘파워의 확산’과 다극화는 필연적인 사실로 등장할 것이다. 미국 국가정보회의(NIC) 『글로벌 조류 2030』(2012년 12월 발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중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되고, 아시아가 서구를 능가한다고 분석하였다. 즉, 미국의 상대적 우위와 중국의 대국화가 중심축으로 작용할 것이며, 여기에 신흥국의 현저한 부상에 따른 ‘균형할거’의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동아시아 질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더욱 중국과 상호의존성이 심화될 것이며, 안보상으로는 더욱 미국에 이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일본의 영향력 강약, 미중의 상대적 지위를 2가지 축으로 했을 때 동아시아 질서에 관한 4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볼 수 있다.

첫째, 일본 영향력 ‘약’, 중국 영향력 ‘강’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국 중심의 지역 질서가 형성될 것이며, 중국 중심 계층형 세력권 확장 및 폐쇄된 동아시아 통합이 진행될 것이다.

둘째, 일본 영향력 ‘약’, 미국 영향력 ‘강’의 상황이다. 단적으로 일본은 ‘매몰되는 일본’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중심의 동맹관계, 불안정한 동아시아로 표현될 수 있다.

셋째, 일본 영향력 ‘강’, 중국 영향력 ‘강’의 상황이다. 이는 중국과 미일동맹이 대치하는 세력균형 질서를 뜻한다.

넷째, 일본 영향력 ‘강’, 중국 영향력 ‘약’의 상황이다. 이는 다원적 국제질서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중국의 민주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변수가 있는데 미국의 동아시아 관여에 대한 의지, 중국의 변화 양상, 즉 중국 내 개혁파·국제주의자·다문화주의자가 보수세력을 압도하는 경우, 한반도 통일, 즉 북한 붕괴 후 한국주도의 통일을 예상하는 경우이다.

III. 미래 일본의 외교안보 과제

1. 미일동맹의 미래: 글로벌 수준의 강화 확대

일본에게 있어 현재 가장 중요한 외교과제는 ‘대중관계’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미일관계’이다.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냉전 종결 이후 미국의 가치관이 변해서 ‘아시아에서 군사적 관여 유지를 위해 더 이상 돈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부상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현재 가장 염려하는 것은 ‘국제테러조직의 세력 확대’와 ‘핵확산’이지만,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이러한 점을 저지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는 않는다.

현실문제로서 ‘중국의 초강대국화’는 미국에게 있어서도 일본에게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위협’이며, 중국이 미국 및 일본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국가로 변모하기까지는 지금부터 적어도 수십년은 걸릴 것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미일은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 즉 일본 입장에서 대미관계는 계속해서 강화하고 양국의 국내사정을 감안해서 ‘기브 앤드 테이

크(give and take)'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 된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1957년에 발표한 3대 외교 기본방침의 전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다. 3대 외교 기본방침은 UN 중심주의, 미일동맹, 아시아외교이다. 이러한 요소를 모두 포함한 것이 일본 외교의 특징인 '전방위 외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한 '외교적 지평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 외교는 전전의 수동적 외교에서, 냉전 시기에는 '미일동맹-평화헌법' 구조 내의 외교였다면, 아베 정부 이후에는 '미일동맹-평화헌법' 구조를 벗어난 외교를 지향하고 있다.

대미관계에서 일본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글로벌 차원의 동맹을 계속적으로 강화할 것이고,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UN 외교 확대와 연대도 모색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아시아 철수, 중국의 강력한 일극 체제 실현 시, 일본의 대미관계의 변화 가능성은 상존한다.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호응하면서 미국과의 글로벌 차원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일본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의 미일동맹을 지원할 것이다.

첫째, 일본 국내적 '성장 전략'을 가지고 글로벌 외교를 추진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고령화, 소자화 등의 국내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글로벌 외교를 추진할 것이다.

둘째, '적극적 평화주의'를 표방하면서 국제 공헌 확대를 추구할 것이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2가지 차원에서 전개될 것이다. 먼저 UN을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 평화주의이다. 비록 2010년대 이후 아베 정부에서 집단적 자위권 각의결정, 평화안보법제 등의 제정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공헌 확대 기회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평화헌법 개정이 실현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에서는 UN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 모색될 수 있다. 또 하나는 미일동맹을 통한 국제 공헌 확대이다. 미국은 냉전 시기부터 계속해서 일본의 외교안보 측면에서 역할분담을 요구해 왔다.

셋째,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관을 중시할 것이다.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혹은 구상)은 이 지역에서 규칙에 기반한 질서(rule-based order) 유지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일본 정부는 미일동맹뿐만 아니라 호주, 인도, 아세안 그리고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국가 등과의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현재 아베 수상이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즉 아베 수상은 보통국가화의 진행속도를 더욱 빠르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통국가화는 미일동맹 강화라는 흐름 속에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특히 일본은 자신의 위상 강화 및 중국 견제라는 글로벌 차원과 지역 차원에서 미국과의 협력 하에 국제공헌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평화헌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상황과 '피를 흘릴 수 있는 동맹'이라는 차원에서 미일동맹의 과제 혹은 한계가 존재한다.

2. 일본의 대중 정책

현재 중국과 일본은 2010년 센카쿠 충돌 및 국유화 문제, 2013년 아베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었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최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2019년 4월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청소년 교류 추진’ 행사에서 중일 관계가 2018년에 정상 궤도로 돌아오면서 회복되었다고 강조하였다(『뉴시스』 19/04/14).

하지만 일본은 군사, 경제 양면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현상변경 세력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실크로드 경제권구상인 ‘일대일로’를 주장하면서 풍부한 자금력을 배경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항만과 철도를 정비하거나 투자를 통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양 권익의 확대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견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지역 질서에 대한 중국의 현상변경을 군사안보 측면에서 더욱 인식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동·남중국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현상변경 정책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아베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센카쿠 제도 방어를 포함한 미국의 대일본 안보공약 이행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방위태세 강화 및 방위력 증강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해양 진출을 도모하는 중국의 부상에 대처하기 위해 미일 동맹 강화를 기본 정책으로 갖고 있다.

원래 ‘인도태평양’ 구상은 아베 수상이 실크로드 경제권구상인 ‘일대일로’로 중국이 서측으로 영향력 확대를 지향하는 점에 대해 지정학적 밸런스를 취하려는 대응조치이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일본 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항하는 대중 견제 외교로 이해된다. 하지만 일본 내 자유주의자들의 시각은 위와 같은 단기적 혹은 반응적 대중 대응책은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를 유지하려는 일본의 외교전략으로서의 근시안적인 시각이라도 비판한다(田中 2018).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라는 관점에서 일본은 항상 세계 성장에 시선을 두면서 성장과 일본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일본의 번영을 유지하려고 했다. 특히 최근 인도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기존 태평양보다 ‘인도태평양’으로 지역 개념이 확대되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중국의 동향에 단기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국익 개념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 포위망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가치관 외교가 아니라는 점’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가치관 외교와 전혀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국가와의 대결 구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즉 중국을 경계하면서도 중국의 경제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가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일본이 중국에 대한 대결 구도를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일본은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질서 변동에 위협하는 현상변경자로 인식하고 쿼드 협력을 통해 대응하면서도,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현실을 인정한 가운데 중국과의 협력도 함께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중관계에서 일본은 ‘갈등’과 ‘관리’의 지속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일본은 비록 조건부지만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찬성을 표명하면서 중일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대중 정책에 있어 일본 외교의 실용주의적 성격, 즉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는 정경분리 원칙과 함께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30 일본의 군사전략의 추구방향을 살펴보면 현재 일본은 난세이 방면에 중점을 둔 방위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중국 본토부터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진출로를 봉쇄하기 위해 난세이 제도를 연결하는 군사거점화 전략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해상우세’, ‘항공우세’ 전략을 통해 난세이 제도에 감시부대 및 미사일 배치를 통해 억지력을 높이고, 유사시에 전투기 및 잠수함 등과 연계하면서 중국의 움직임을 봉쇄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즉 일본판 ‘접근금지·영역 거부(A2/AD)’ 전략이다. 하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자위대의 수송, 병참 분야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방향이 함께 추진될 것이다.

결국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공존하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유지하려는 미일과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의 세력 싸움은 한반도에서 북한과 일본의 만남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일본의 한반도 정책

일본의 대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로서 중국 및 북한 문제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미국을 포함하는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제 실현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일 관계는 근본적인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악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사 문제 해결 없이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형성이 어렵다고 인식한다. 반면에 일본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등으로 양국 간 현안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미해결 사안이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더욱이 한일 관계 악화 속에서도 조용히 협력이 진행되던 안보 협력도 진행이 어려워졌다. 2018년 제주 관함식에서의 육일기 게양 문제로 해상자위대가 불참하고, 2019년 10월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청하지 않은 것은 한일 안보 협력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19년 12월 동해상 레이더 조사 문제는 평상시 한일 간에 커다란 문제로 발생되지 않을 문제이지만, 일본 정치인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 일본 정부가 보수지지층 결집을 위해 한일 관계 악화를 이용한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아베 총리의 안보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한일 관계에서는 한일 간 ‘전전(戰前) 인식’과 ‘전후(戰後) 인식’의 극복이 필요하다. 즉 한국은 전전 일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강하고 전후 평화국가 일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반대로 일본은 전전에 대한 기억이 희미한 가운데 전후 한국, 특히 한류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이해 속에 과거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일본의 대북정책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3대 과제로 설정하고, ‘대화과 압력’, ‘행동 대 행동’의 기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 독자 정책의 전개도 가능한 것이 일본 외교의 특징이다. 최근에는 북일 간 비공식적 접촉이 목격되기도 한다.

한반도가 2030에 통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일본은 한반도가 통일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희망사항이 있다고 파악된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국가이다. 둘째, 비핵보유국이다. 셋째, 일본에 대한 역사적 적대감의 소멸이다. 즉 일본은 통일된 한반도가 일본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며, 한반도 비핵화가 진행된 가운데 중국에 편

향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안보 위협의 차단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본 내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상황을 대비한 시나리오 분석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는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한 일본의 대응 방안을 시나리오 형태로 작성한 ‘한반도 시나리오, 플래닝(2014)’을 발표하였다(日本國際問題研究所 2014).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일본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들이 총망라된 이 보고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며 제1부는 김정은 정권의 분야별 현황 분석, 즉 김정은 체제, 대외정책, 북중관계, 남북관계, 이란 핵협상 등의 현황 분석이 이루어졌다. 제2부는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안정성’에 주목하면서 한미일의 대응을 군사 및 외교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향후 1-2년 내 북한의 군사도발에 관한 시나리오 및 억지 및 대처로 대표되는 방위 대응, 비확산 외교와 같은 정책적 제언도 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 일본은 전체적으로 한반도 관련 연구를 크게 2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나는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연구 혹은 시나리오이며, 또 하나는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의 북한 핵무기 문제이다. 이것은 북한 붕괴와 북핵 문제가 일본 안보에 중요한 요인이며, 한반도 통일 과정 및 그 이후에도 일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이것은 한반도 통일 이전에 북일 간에 해결되어야 할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 이후의 전후 배상 문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최근 일본의 대한민국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북한의 비난은 장래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한국이 일본과 맺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의 불완전성을 비판하고 있고, ‘1965년 체제’를 유지하려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강경한 대일 비판 발언은 향후 북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1965년 체제’의 불완전성, 즉 식민지배의 불법성 인정 및 그에 따른 확대된 ‘배상금(식민지배 피해, 분단피해 등)’ 요구를 위한 입장 강화에 유리하다.

북한의 대일 논조는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최우선 순위는 북미 대화를 통한 대북 경제 제재 완화이므로 당장 시급하게 일본과의 대화를 시도할 필요가 없다. 북한은 민족주의에 기반한 ‘일본 vs 남북한’ 구도를 만듦으로써 향후 한국의 대북 지원 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북일 정상회담은 빠른 시기에 성사되기는 어렵다. 북한의 최우선 순위는 북일 정상회담이 아닌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에 있다. 특히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남북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성사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아베 수상이 ‘조건 없는 정상 간 만남’을 제시하고 있지만, 선결조건인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해결이 요원하다. 비공식 정보에 따르면 북한이 납치생존자 2명에 대한 정보를 일본측에 제시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납치생존자 2명은 가족이 없는 등 무연고자 상태이므로 일본 국민들을 납득시킬 만한 조건이 될 수 없다(진창수 2019, 13). 이 정보가 맞는다면 향후 북일 간에 조건 없는 만남을 위한 ‘대북 제재 일부 완화’와 같은 일본측의 태도 변화 혹은 ‘2명+α’와 같은 북한측의 새로운 제시가 없는 한 쉽지 않다.

향후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서 일단 북한은 스톡홀름 합의 이행 재개로 다시 돌아가는 선택을 취할 수 있다. 스톡홀름 합의 중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재조사’ 재개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으며 ‘2명+α’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아베 수상이 조건 없는 만남을 얘기하고 있으므로, ‘납치자 문제 재조사’ 재개 수준에서 북일 대화는 가능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 본인의 의지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아베 수상과의 대화 의지를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표명한 적

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은 전무한 상태이다.

향후 과거사 문제에서 북한이 입장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없다. 북한 국내적으로 항일 운동을 통해 성립된 정권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친일 정부(이승만, 박정희 정부)라는 남한과의 정통성 우위를 계속해서 내세울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잘못된(혹은 불완전한) 1965년 합의’를 북한이 ‘올바른 과거사 문제 처리’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았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일본에 대해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과거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대북 경제 제재 해제 및 지원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려고 할 것이다.

IV. 나가며: 2030 일본의 외교안보 방향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 안정 및 국제질서 유지를 제공하는 역할에 힘을 쏟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중국의 규범 및 이념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중국 중심의 지역질서’가 형성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이 이대로 쇠퇴일로로 걷게 된다면 ‘매몰되는 일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안정성을 제공하는 일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존재감 있는 일본’을 추구하면서 이를 통해 이 지역 내에서 ‘세력균형 질서’를 탄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일본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미국의 영향력 유지에 협조하면서 호주·인도·아세안과 연대하는 ‘다원적 국제질서’ 구축에 공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 일본의 외교안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접근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동맹 네트워크’의 강화 및 확대이다. 최근 인도태평양 구상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에 더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유럽(영국, 프랑스 등)과 동맹 혹은 동맹에 준하는 ‘준동맹’ 관계를 확대할 것이며 여기에는 미일동맹이 기본 축으로 작용한다. 특히 일본은 호주, 인도, 아세안과 매우 밀접한 외교안보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둘째, 사안별 협력체제 구축이다. 여기에는 ‘인간의 안전보장’과 ‘비전통안보’를 포함하는 대규모 재해, 질병, 국제 테러리즘, 해양 사고 등이 주요 사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셋째, 다자간 포럼이다. 다자간 포럼은 중국에 대한 대응이 주요 목적이며, 중국에 대한 힘의 균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중국의 부상을 평화적으로 이끄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유연한’ 가치관 외교의 추진을 계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법의 지배, 인권, 민주주의, 환경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인간의 안전보장 추진을 위한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일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유연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이슈에 공헌하는 일본이라는 점에서 인구 증가(신흥국)에 따른 음식료, 에너지 자원, 환경 등에 대한 기술 공여와 함께 ‘과제 선진국’으로서의 일본 미래상을 예측할 수 있다. 즉 고령화와 인구감소사회에 돌입하는 선진국 입장에서 의료, 복지 등 분야에서 과제 및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이 주변국, 특히 과거 식민지 경험 등으로 피해를 준 아시아 국가들과의 화해가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한국과의 역사 대화가 재개되어야 하며, 대내적으로는 역사문제의 처리가 필요하고 도쿄 재판과 같이 다양한 국내적 해석이 존재하는 사안에 대한

통일된 역사관 확립이 필요하다. 즉 대내외적 지적 교류와 역사 교육의 충실이 요구된다. 또한 일본은 세계를 향한 발신 강화를 추구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민간 주도 싱크탱크를 강화하고,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증가, 국제회의 유치 등의 활동을 통해 일본이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 이명찬. 2008. “헌법 9 조의 개정과 ‘보통국가’, ‘권력국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평화연구〉 제 16 권 2 호: 67-104.
- 진창수. 2019. “한일관계 재구축을 위한 해법.” 〈세종정책브리프〉 2019-11(2019.8.28.): 1-18.
- 外務省. 2015. “20 年後のアジア太平洋地域秩序と日本の役割 報告書.” (2015 年 3 月)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077719.pdf> (검색일: 2019 년 12 월 12 일).
- 菊池努. 2019. “「インド太平洋」戦略の地政学: 地域秩序の主体は誰か” 〈国際問題〉 No.687(2019 年 12 月): 1-6.
- 自民党国家戦略本部. 2014. “「2030 年の日本」検討・対策プロジェクト中間報告.” (2014.6.30.)
https://jimin.jp-east-2.storage.api.nifcloud.com/pdf/news/activities/act_001.pdf (검색일: 2019 년 12 월 12 일).
- 首相官邸. 2013.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平成 25 年 12 月 17 日).”
http://www.kantei.go.jp/jp/kakugikettei/2013/_icsFiles/afieldfile/2013/12/17/20131217-1_1.pdf
 (검색일: 2019 년 12 월 12 일).
- 田中明彦. 2018.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戦略」の射程.” 〈外交〉 Vol.47 (Jan./Feb. 2018): 36-41.
- 日本アカデメイア・長期ビジョン研究会. 2015. “戦後 70 年 我々が次の世代に残すべき日本の姿.” 長期ビジョン研究会最終報告. <https://j-akademeia.jp/forum/0205lastreport.pdf> (검색일: 2019 년 12 월 12 일).
- 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 2019. “2030 年代の日本経済はゼロ成長に.” 中期経済予測/2019-2035 年度.
<https://www.jcer.or.jp/economic-forecast/20191111-4.html> (검색일: 2019 년 12 월 12 일).
- 日本国際問題研究所. 2014. 《朝鮮半島のシナリオ・プランニング》 日本国際問題研究所.
- 米国国家情報会議(編集), 谷町真珠(翻訳). 2013. 《2030 年 世界はこう変わる アメリカ情報機関が分析した「17 年後の未来」》 講談社.

■ **저자:** 이기태_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연구위원. 일본 게이오대학교(慶應義塾大学)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일본 외교안보와 북일관계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일 관계의 긴장과 화해〉(2019), "인도태평양 규칙기반 질서 형성과 쿼드협력의 전망" (2019), "아베 정부의 대영국.대프랑스 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네트워크 확대" (2019)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김세영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8) sykim@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19년 12월 27일

[미래일본2030] 아베 이후 일본은 어디로? (6)

“미래 일본의 외교안보 과제: 미일동맹, 대중정책, 한반도정책”

979-11-90315-42-5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